

# 미술은행, 2% 부족한 미술시장의 희망

윤태건 | THE TON 디렉터



윤태건 THE TON 디렉터

미술은행 제도는 그야말로 빈사의 미술시장으로서는 '가뭄의 단비'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미술시장과 배고픈 작가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작품을 사주겠다는 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하지만 단체별, 장르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안배를 염두에 두다 보니 미술은행 제도가 과연 애초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지 계속 의구심이 듦다. 우리 미술시장에 시급한 것은 화랑의 재고 처분을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면 많은 작가의 작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실 기업에 밀 빠진 독 마냥 자금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가 회생하지 않는 것처럼 경쟁력 있는 화랑에 대한 선택적 지원, 유망한 작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미술시장의 시스템, 구조 자체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같은 선상에서 미술은행 제도의 운영과 작품 구입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연말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2004년은 미술계로서는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연초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둘러싼 잡음이 시끄럽더니, 곧 이어 문화관광부의 새 예술정책의 발표, 난장판이 되어버린 공공미술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 국립현대미술관 책임운영기관화와 기무사 부지 이전 문제,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때아닌 '달타령'을 가져온 미술대전 폐지 논란 등 하나같이 굵직굵직한 미술계의 현안들이 치열한 논쟁과 극단적인 대립을 몰고 왔었다.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가 쉴새없이 터져 나왔던 2004년이었기에 2005년에는 어떨지 벌써 긴장부터 된다. 공공미술 개선, 기무사 부지 이전 등 지난 한 해 미봉했던 문제들이 올해 다시금 불거져 나올 것이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미술계를 대상으로 한 권고안도 벌써 3가지나 나왔다. 올해도 아마 2004년보다 크고,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어 쉽게 넘어갈 것 같지가 않다. 시작은 미술은행 제도 시행과 관련된 공청회 자리였다.

새해의 들뜬 분위기도 가시기 전인 지난 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미술은행 제도 시행에 관한 공청회는 150명이 넘는 미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방식과 구입대상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후끈 달아올랐던 공청회의 날선 설전들은 미술협회, 화랑협회 등 각 단체들의 입장 차이에 따라 자기 몫 쟁기기에 골몰하는 인상을 남겨 미술은행 제도의 시행을

반색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게 했다.

특히 전체 금액 25억 원 중 15%를 KIAF, 화랑미술제 등 현장에서 구입하는 안에 대해 미술협회 이영길 사무처장은 “화랑과 작가의 갈등이 쌓인 상황에서 화랑을 통하지 않고 작가에게 직접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화랑협회 김창수 총무이사는 “화랑이 활성화되어야 작가도 산다”며 15%의 확대를 주장하는 등 15%의 지분을 화랑을 통해서 구입하는 안을 놓고 미술협회와 화랑협회가 극단적으로 대립했다.

그 밖에 전업작가협회의 이순애 씨는 “작가적 의지가 확고한 작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자격 조건의 강화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안배를 주장했다. 참여한 한 공예작가는 공예가 빠졌다며 구입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미술은행 제도의 큰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25억 원이라는 금액을 두고 각 단체들의 서로 더 많이 갖겠다는 ‘아우성’에 묻혀 버렸다. 게다가 재경부의 한 사무관이 “자체 수익모델을 창출하지 않으면 예산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식의 암묵적인 압력과 문광부의 김갑수 과장이 “초기의 실험적 작품구입으로 인해 폐지론이 거론된 캐나다의 예

를 볼 때 실험적 작품구입은 재정 자립도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백기를 들어버린 상황에서 한국의 미술은행 제도가 과연 미술시장 활성화와 신진작가 창작지원이라는 애초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미술은행 제도 복지정책인가? 예술정책인가?

공청회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기본적인 방향 자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뒤로 한 채 2개월이 넘게 지났다. 그 사이 벌써 발빠르게 ‘미술은행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미술은행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에 민경갑(동양화, 예술원회원), 운영위원으로는 노재승(조각, 성신여대 교수), 박우홍(화랑, 동산방화랑 대표), 김순웅(경매, 서울경매 대표), 최병식(평론, 경희대 교수), 이종구(서양화, 중앙대 교수), 김이순(미술사), 박신의(평론, 경희대교수), 양현미(미술이론,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갑수(당연직, 문화부 예술정책과장), 최은주(당연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의 면면을 보면 그야말로 황금비율이 아닐 수 없다. 각 단체와 장르, 성별, 나이별로 적절한 안배를 위해 문화부에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미술은행 공청회 당시 패널 구성에서도 그랬듯이 단체별 안배에 치중하다 보니 미협 사무처장, 민미협 사무처장, 화랑협회 총무이사 등 미술은행이라는 현안에 대한 전문성보다는 각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인사로 구성될 위험성이 높다. 이것은 곧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 개진은 뒷전이 되고 ‘단체 뜻 쟁기기’에 열중하게 만든다.



1월 18일 '미술은행 설립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그러다 보니 “법 위에 ‘폐법’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미술계에서는 별로 우습게 들리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고성불패(高聲不敗)의 만고불변의 진리를 되새긴 자리이기도 했다. 국가나 정부, 정치적인 이슈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다. 미술대전이나 국립현대미술관 책임 운영기관화 등 미술계 쟁점이 되었던 일들부터 미술은행이나 공공미술 등 새 예술정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가 간만에 중장기 정책을 내놓은 것이 떼지어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 집단에 휘둘려 방향타를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어 보인다. 게다가 작년에 몇 차례 홍역을 겪고 난 문화부의 태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정책의 입안과 공청회 패널 구성이나 운영위원회 구성 등 실제 미술은행의 성격을 좌지우지하게 될 인사를 구성하는 책임을 맡은 문화부에서 한편으로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명 아래, 한편으로는 목청 큰 집단을 미리 미리 배려하고, 그네들의 이해와 요구를 한 발 앞서 정책과 제도에 반영시키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전문가의 의견이고 시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한 장기적인 정책의 실종이다. 여전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가 중요하고, 여전히 골고루 나눠야 잠잠해진다.

이처럼 미술은행 제도를 보면 반가운 마음이 앞서다가도 자꾸 뒷머리가 가려워진다. 이미 미술은행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벌써 몇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작품추천위원의 위촉과 곧 작품심의위원까지 위촉될 예정이다. 빠르면 4월 중으로 한차례 작품 구입이 될 수도 있다. 새 예술정책과

관련한 다른 정책들은 아직 지지부진한 데 비해 미술은행 제도는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작품 구입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지엽적인 논란 이외에는 미술계 내에서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제도 시행의 큰 걸림돌은 없기 예상된다.

그도 그럴 것이 미술은행 제도는 그야말로 빈사의 미술시장으로서는 ‘기품의 단비’다.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미술시장과 배고픈 작가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작품을 사주겠다는 데 감히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하지만 단체별, 장르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안배를 염두에 두다 보니 미술은행 제도가 과연 애초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지 계속 의구심이 듦다.

#### 나눠주기식 작품 구입, 실효성 모호

미술은행이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전시나 공공기관,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프랑스의 Fnac을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의 아트뱅크(Art Bank) 등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는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부터 2~300점의 신진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고 향후 5년간 매년 30억 원 내외의 작품을 구입하는 한편, 2007년에는 수장고와 범인 설립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술은행운영위원회’와 ‘작품추천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구성하고, 시행 초기에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되 2007년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신

미술은행이란 정부가 미술품을 구입하여

전시나 공공기관, 일반에 임대하는 제도로서

프랑스의 Fnac을 대표적으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캐나다의

아트뱅크(Art Bank) 등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은행 수장고

진작가들의 창작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문화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미술은행 제도는 장기 불황에 친 미술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지금까지의 미술정책이 대부분 창작 지원에 그쳤던 반면 미술은행 제도는 창작, 유통, 향수의 3박자를 입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이 특히 눈길을 끈다.

IMF 이후 급속히 몰락한 한국 미술시장은 장기간의 침체로 컬렉터의 이탈과 전근대적인 미술시장 시스템, 호당가격, 이중가격 등 불투명한 가격체계를 개선하지 못한 채 작가와 화랑, 컬렉터간의 신뢰 상실로 이어졌다. 특히 대부분의 컬렉터가 국내 미술시장을 외면한 채 투자 가치가 높은 해외 미술시장을 선호하거나 국내에서도 환금성이 높은 고가의 미술품만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공공컬렉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시점에서 미술은행 제도의 시행은 때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짧은 호황기를 보냈지만 IMF 이후 급격하게 몰락한 채, 여전히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미술시장의

뼈저린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미술시장에 연간 2~3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미술시장의 전근대적인 시스템, 불합리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동반되지 않을 경우 결코 장기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앞에서 언급한 미술은행 제도가입안되는 과정에서 각 집단에 대한 배려로 새 예술정책이 항상 언급했던 '선택과 집중'은 사라지고 여전히 '소액다건'으로 나눠주기, 선심성, 수혜성 작품 구입이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 미술시장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현대미술의 흐름, 작가들의 작업 경향과 미술시장의 최일선에 있는 화랑 등에서 전시되고 유통되는 작품의 흐름이 크게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당장 광주비엔날레 등 블록버스터 전시나 미술관 전시, 대안 공간의 전시나 각종 기획전의 모습과 상업화랑에서 판매되는 작품, KIAF, 화랑미술제 등 상업적 아트페어의 그것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물론 현대미술의 최신 흐름과 상업적인 전시의 흐름은 약간의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 스위스 바젤, 마이애미 바젤, 프리즈, 아모리쇼 등 해외의 정상급 아트페어와 미국, 유럽 중심가의 화랑 전시만 봐도 국내 아트페어와 상업화랑에서 전시되고 유통되는 작품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 무엇보다도 작품 수준이 우선해야

결국 미술은행 제도가 국내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신진작가 창작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국제적인 경쟁력을 겸비한, 그리고 10년, 20년

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미술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 중심으로 컬렉션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부가 변명처럼 주장했던 '미술은행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일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몰려가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일반 취향을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정책의 입안과 결정을 하는 분들의 취향은 아닐까? 그나마 미술은행 제도의 공청회 당시에만 해도 제도의 목적에서 신진작가의 창작활동 고취와 미술시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으나 현재 나온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보면 운영원칙으로 "미술품의 구입, 대여 등을 통해 미술문화의 대중화와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2조1항)"이 더 중요해지고 창작지원과 미술시장 활성화는 뒷전에 밀렸음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작품 구입 원칙으로 "구입 작품이 대여를 통해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 일반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작품(11조2항)"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어 공청회 당시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더구나 "설치미술 및 미디어 아트 등의 경우(작품구입을) 미술은행 운영 추이를 보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13조)"는 조항은 그야말로 암담하게 만든다. 도대체 지금 신진작가들의 작품 경향이 어떤지,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미디어 작품은 정말 공공기관에 대여를 하기 어려운 것일까? 오히려 공공기관이야말로 미디어 작품을 전시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미디어 작품

의 특성상 개인 컬렉터가 구입하기에는 평면 회화보다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로비에 설치된 미디어 작품은 국민들의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2조1항)"하기에 더욱 안성맞춤이다. 아마 전시, 대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리가 귀찮은 것은 아닐까? 공무원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미디어 작품을 작동시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가. 감상하기 편안하고, 관리하기 수월한 작품을 액자나 튼튼하게 해서 빈 벽에 걸어두는 것이 서로서로 가장 좋은 일인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설치 작품이나 미디어 작품을 하는 작가들도 단체를 하나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부에 요구하라. 고성불쾌다.

공공컬렉터의 영향력은 민간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당장 KIAF, 화랑미술제 등 전시 현장을 통해 미술은행이 구입하는 15%(2005년 책정 예산 25억 기준으로 3억7천여만 원) 때문에 많은 화랑에서 그야말로 "대여에 적합한" 작품 중심으로 부스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여수요자가 직접 선택한 작



국립현대미술(FNAC) 지하 수장고

이제 공은 미술은행운영위원회와 작품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미 짜여진 미술은행 운영규정의 틀에서

운신의 폭이 좁지만 적절한 안배와

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아직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품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가 가능(11조3항)" 한 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미술은행의 예산은 대여수요자의 예산이 아니라 국민들, 우리 미술인들의 세금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대여수요자라는 명목으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작품이 구매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처럼 미술은행 자체는 당연히 쟁수를 들고 환영할 만하지만 전체적인 방향,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많다. 수익성이 문화부의 생각처럼 결코 낙관적이지 못하다거나 수장고 건립을 위한 과도한 예산, 관리 체계의 비효율성 등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은 차라리 옥의 터로 넘기자. 무엇보다 큰 문제는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작가, 작품이 집중적으로 컬렉션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새 예술정책이 항상 언급했던 '선택과 집중'은 사라지고 여전히 '소액다전'으로 나눠주기, 선심성, 수혜성 작품 구입이 될 위험성이 크다. 기회균등도 좋고 지역작가 배려도 좋다. 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우는 아이 띄 준다'는 식으로 이 작가, 저 지역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금 우리 미술시장에 시급한 것은 화랑의 재고 처분을 도와주는 것도, 가능하면 많은 작가의 작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부실 기업에 밀 빠진 독 마냥 자금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회생하지 않는 것처럼 경쟁력 있는 화랑에 대한 선택적 지원, 유망한 작가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미술시장의 시스템, 구조 자체를 선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이 같은 선상에서 미술은행 제도의 운영과 작품 구입 방침이 정해져야 한다. 아픈 환자에게 모르핀은 단지

통증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다. 과연 미술은행 제도가 복지정책인가? 아니면 예술정책인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복지정책은 당연히 중요하다. 홈리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 모두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홈리스가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홈리스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제도가 보장되는 것이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해결책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미술은행 제도를 통해 많은 작가, 화랑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미술시장은 계속 불황이고 그나마 정부에서 몇 작가당 몇 년에 한 번 꼴로 구입하지만 그것이 한국 미술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와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결국 미술은행 제도가 위급한 상황에서 영점대 방어률을 자랑하는 구원투수로 투입되었지만 문제는 지금 미술시장으로서는 대타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내보낸 격이다. 빨빠른 대주자가 필요한데 4할 대 거포를 투입한 격이다.

이제 공은 미술은행운영위원회와 작품추천위원회, 심의위원회로 넘어갔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이미 짜여진 미술은행 운영규정의 틀에서 운신의 폭이 좁지만 적절한 안배와 합리적인 인사로 구성되어 아직은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 미술시장의 활성화, 신진작가 지원, 문화향수권 신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에는 아직 2% 부족한 미술은행 제도의 나머지를 채우기를 기대하기에는 때늦은 것일까? 